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수신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제목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을 위한 조례안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
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
의합니다.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을 위한 조례안 1부. 끝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 (서명 또는 인)

외 7명

(발 의 의 원 서 명 따 로 붙 임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조례안

【발의의원】

[illegible]

의안번호	2753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
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발의자	손인수 의원 외 7명
발의 연월일	2021. 5. 10.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(손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0.

발의의원 : 손인수, 노중용, 차성호,
손현옥, 안찬영, 이순열,
박성수, 박용희

1. 제안이유

세종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,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세종시 학교 현장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다.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라. 교직원 연수와 자살시도학생,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와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(안 제8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3조,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붙임 2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, 맞춤형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,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”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,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·육체적 건강의 보호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(이하

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
3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
4.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
5.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교육감 소속 공무원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교직원 역량 강화)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,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)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·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

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·자살 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지원)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4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

- 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
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
5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안 제8조)
-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안 제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의원 손인수